
2018년 주요 업무계획

=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2018. 1.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 | |
|----------------------------------|----|
| I. 2017년 농정 평가 | 1 |
| II. 2018년 업무추진 여건 | 4 |
| III. 2018년 농정 추진방향 | 7 |
| 1. 농정개혁을 넘어 농업 대변화 추진 | 7 |
| 2. 2018년 중점 추진방향 | 8 |
|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 9 |
| 1.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 10 |
| 2.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 22 |
| 3.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 38 |
| 4.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조성 | 55 |
| 5.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 구축 | 64 |
| [붙임]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70 |

I. 2017년 농정 평가

- ◇ '17년에는 쌀 조기격리 등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추동력 확보에 주력
 - 예기치 못한 살충제 계란 사태, 외래 붉은 불개미 발견 등의 위기 상황에도 적극 대응
- ◇ 주어진 예산과 정책 환경 하에서 과거와는 다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선제 조치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성과 창출

□ (쌀 시장 안정) 한 발 빠른 대처로 20년전 수준에 머물던 쌀 값 회복

- 역대 최초 햅쌀 가격 형성前 수확기 대책을 발표(9.28)하고, '10년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37만톤) 등 총 72만톤 정부매입



* ('17.6월) 126,767원/80kg(최저) → (10월) 151,013 → (11월) 153,048 → (12월) 155,579 → ('18.1.15) 158,712

-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으로 국격을 제고하고, 국산 쌀 약 5만톤 해외 원조로 쌀 수급안정 효과 기대

* 5만톤 원조 시, 1만 ha의 농지 휴경 효과

□ (갈등 해결) 쌀 우선지급금 환급, 용산 화상경마장 등 갈등 해소

-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16년산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농업인 단체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

* 농식품부-농업인단체-농협간 협약(8.24)을 통해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방안 마련

- 사회적 타협을 통해 4년 이상 지역주민 등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17.12월)

* 대전 월평동 장외 발매소도 이전부지 선정이 안 될 경우(~'21년 1분기) 선 폐쇄

□ (소비기반 확대)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선물비 가액기준을 조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하여 소비촉진 도모

*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이 50% 넘게 포함된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 상향 (5만원→10),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 포함 시 10만원까지 허용

-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 품목별 소비촉진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 추진

□ (재해대응) 가뭄 등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재해 복구 지원 강화

- 영농기 극심했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협업, 추경예산 편성·지원 등 총력 대응으로 가뭄 피해를 최소화

* 가용 장비, 인력(26천명)과 예산(국고 1,162억원, 지방비 1,698) 집중 지원

- 재해피해 발생시 복구비 지원(대파대·농약대) 단가를 실거래가의 66%(현행 52%) 수준으로 인상

* (농약대) 채소류 30만원→ 168, 과수 63만원→ 175, 일반작물 22만원→ 52 (대파대) 엽채류 297만원→ 410, 과채류 392→ 619, 일반작물 220만원→ 266 등

□ (위기관리) 살충제 계란 사태, AI 발생 등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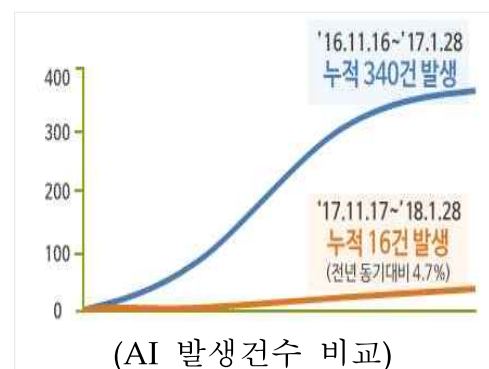
- 계란에서 살충제 검출 즉시 모든 농장의 출하를 금지하고, 전수 검사 실시와 폐기조치 등으로 조기 수습

*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계획’ 수립

- 붉은 불개미 발견(9.28) 즉시 긴급 방역조치를 하였고, 관계부처 합동 예찰체계를 강화

- 상시예찰 과정에서 AI를 발견하고, 농가 이동통제, 예방적 살처분, 이동중지 등 초동방역 조치로 확산 방지

* AI 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제한 확대(전체 사육두수의 37% 수준)



- (축산 공정거래) 축산업의 투명한 경쟁 구조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 닭고기의 유통구조 투명화,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
 - 농가의 권익보호와 협상력 제고,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을 위해 '축산계열화 사업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마련('17.9)

- (현장농정) 농정개혁위원회 운영, 농식품부 전 직원의 현장 소통 업무체계 구축 등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농정개혁 추진
 - 농개위를 총 21회 개최하여, 농업 재해 대응, 수확기 쌀 수급안정, 축산업 근본대책 등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대책 마련
 - 농식품부 전 직원이 총 137개의 현장 건의를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성과 우수사례 확산(발표회, '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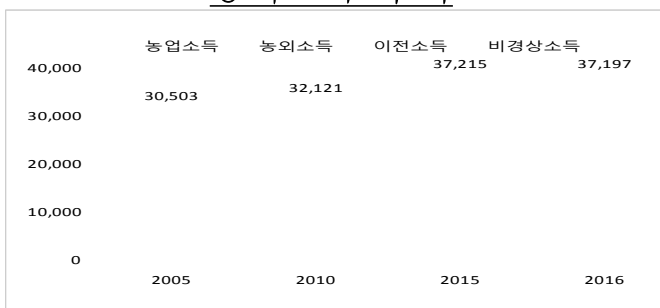
※ (보완할 사항) '17년은 쌀 값 회복, 살충제 계란 사태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한 결과, 미래 농업을 위한 근본적 개혁 추진 미흡

- 쌀 값 회복을 넘어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자급률 제고 등 종합적인 식량 생산 체계 개혁 필요
- 살충제 계란 사태로 촉발된 인증제의 국민 신뢰 저하 문제, 밀식 축산 사육환경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 요구
-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취약대상 예찰, 사육 제한 등 촘촘한 예방 방역과 과감한 현장대응으로 AI 확산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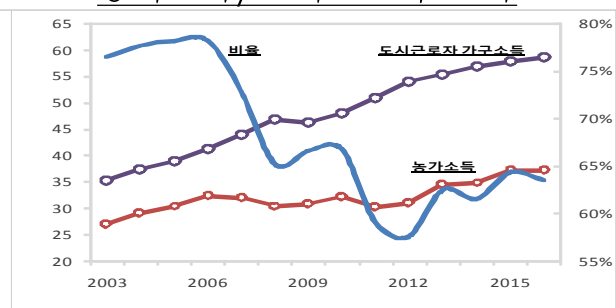
Ⅱ. 2018년 업무추진 여건

- (농식품산업) 농림업 생산액은 지난 3년간 감소*한 반면, 식품 산업은 10년간 연평균 7.7% 수준 성장('06: 98.1조원 → '15: 192.0)
 - * 농림업 생산액 : ('13) 51.9조원 → ('14) 51.6 → ('15) 51.4 → ('16) 49
- (시장개방) 미국, EU 등과 기 체결한 FTA의 관세감축 효과가 본격화 되고, 추가적인 농산물 개방 요구도 상존
 - * '17년 기준, 한미('12년 발효), 한EU('11), 한중('15) 등 15건의 FTA(52개국) 발효
- FTA 확대 이후 농림축산물 수입액 증가 추세
 - * 농림축산물 수입액 : ('04) 112억불 → ('08) 201 → ('12) 294 → ('16) 297
 - *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우리나라 농산물 총 수입액의 82.7%('16년)
- 한-미 FTA 개정협상, 한-메르코수르 협상 등 추가 개방 압력 우려
- (농가소득)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은 정체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63.5%로 도농간 소득격차 여전
 - *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 ('05) 66.8 → ('13) 62.4 → ('16) 63.5
 - 다만, 70세 미만(전체농가의 61%) 농가의 소득(연 4,859만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81% 수준

농가소득 추이



농가소득/도시근로자 소득



□ (고령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청년층 이농으로 농가 고령화 심화

○ '16년 기준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는 전체 농가 107만호의 1.1%, 40세 미만 농가 인구는 19.1%로 급감(65세 이상 농가 인구 53.1%)

○ 한편, 귀농·귀촌 활성화 등으로 농촌(읍·면)인구가 증가세로 전환('10: 8,758천명 → '15: 9,392)되어 농촌 활력 창출에 기여

* 귀농 / 청년귀농 : ('15) 11,959가구 / 1,150가구(9.6%) → ('16) 12,875 / 1,340(10.4%)

□ (정주여건) 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취약하고, 농촌다움(Rurality)도 훼손

○ 도로 등 기초인프라 개선에도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 다양성, 접근성 부족으로 체감 삶의 질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

○ 개별 농산지 전용, 공장입주 등 난개발로 농촌의 환경·생태적 가치 훼손

□ (식품안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가

○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 이후 농식품 안전 관리, 농축산물 사육·재배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진 상황

□ (환경) 생산 증대를 위한 과도한 투입재 사용 등으로 환경부담 증가

○ 과다 비료 사용 관행으로 질소·인 등 토양 영양과다 문제 발생

○ 밀집된 축산사육 형태는 분뇨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과 악취 문제를 야기하고, 가축질병에도 취약해 높은 사회적 비용 야기

* 질소·인 양분 불균형, 농경지 대비 가축 사육두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시장개방 확대, 소비감소 등에 따라 양적인 성장 전략에 한계

→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전략 필요

→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중심 농정으로 전환

◇ 농업 후계인력 부족과 환경오염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저해

→ 청년 농업인 유입 확대, 환경 부담 저감 등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2018년 국민들이 바라는 농정 >

◇ '18년 국민들은 소득·가격 안정, 안전·품질관리 강화, 혁신성장,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핵심 농정과제로 인식

- 농업인·도시민 모두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 혁신을 가장 중요한 농정과제로 인식
- 이외에 농업인은 소득 및 경영안정, 도시민은 농축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에 높은 관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정과제>

| (농업인) | | | (도시민) | | |
|-------|-----------------|-------|-------|-----------------|-------|
| 순위 | 정 책 | 비중 | 순위 | 정 책 | 비중 |
| 1 |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혁신 | 19.2% | 1 |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혁신 | 17.6% |
| 2 | 직불 중심 농정으로 전환 | 15.2 | 2 |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 16.9 |
| 3 | 농가 경영안전망 확대 | 14.0 | 3 | 농축산물 안전·품질관리 강화 | 15.5 |
| 4 | 농업·농촌 기반 일자리 창출 | 7.9 | 4 | 농가 경영안전망 확대 | 7.8 |
| 5 | 안전,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 7.1 | 5 | 농업·농촌 기반 일자리 창출 | 7.7 |
| 6 | 농축산물 안전·품질관리강화 | 5.4 | 6 | 먹거리 복지 실현 | 6.7 |
| 7 |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 | 5.3 | 7 |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 5.6 |
| 8 | 환경보전형 생산시스템 구축 | 5.1 | 8 |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 | 5.4 |

* '17년 10.30~11.30 농업인 936명, 도시민 1,500명 조사 결과(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인은 일손 부족(16.6%), FTA 등 개방 확대(14.6%)와 농업 생산비 증가(14.0%)를 농업 경영의 위협 요인으로 인식

Ⅲ. 2018년 농정 추진방향

1. 농정 개혁을 넘어 농업 대변화 추진

- '18년은 농정개혁을 넘어 농업 대변화를 준비하는 원년
 - 기존의 정책수단과 방법들을 재검토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편
 - 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삶 속에서 농업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정립
 - 식품안전, 깨끗한 환경 등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식품산업의 체질 개선

- 농업 대변화를 위해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
 - (농정가치) 농업활동을 통한 '생산물' → '사람' 중심의 농정
⇒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
 - (농정방향) '농업 생산성' 제고 → '지속가능성', '혁신'에 중점
⇒ 농업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환경 친화적 생산과 안전 먹거리 제공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 (농정체계) '중앙정부 주도' → '현장 중심'의 '참여와 협력'
⇒ 현장 목소리가 농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민관 협력 농정체계 구축
 - (투융자방향) '쌀', '규모화된 농가', '물적자본' 중심 → '품목 다양화', '청년과 취약계층', '인적자본' 투자로 단계적 전환
⇒ 쌀 수급안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 다른 품목에 대한 정책지원, 영세농 사회안전망 확충 및 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확대

2. 2018년 중점 추진방향

①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 강력한 생산조정과 소비촉진으로 쌀 수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격안정 시스템 도입으로 농산물 전반의 수급안정 도모
-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개편
- 재해 복구비 지원과 농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강화

②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 청년 영농창업 지원, 스마트팜 확산 등 농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 가축질병 방역 체계와 축산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
-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수출 확대

③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 GAP, HACCP, 인증제 개편 등 농축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 축산환경의 근본적 개선과 악취, 분뇨 등 환경부담 저감
- 학교 과일간식 및 농식품바우처 시범운영, 식생활 교육 등으로 국민 식생활 개선과 영양 증진 도모
- 지역 내 생산-소비를 연계하고, 먹거리와 관련된 아젠다를 포괄하는 푸드플랜 수립

④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조성

- 읍면 중심지 활성화, 농촌자원 복원 등으로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 교통·의료·주거 등 생활여건 개선과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
- 융복합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 육성 등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IV.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
전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 농정개혁을 넘어 농업 대변화의 원년 -

중점
추진
과제

농산물 가격과
농기경영 안정

- ① 쌀 등 식량 작물 생산체계 개편
- ②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효율화
- ③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 ④ 자연재해·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충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 ① 농식품·농산촌 분야 일자리 창출
- ② 청년 농업인 육성
- ③ 스마트 농업 확산 등 성장동력 확충
- ④ 세계와 경쟁하는 식품산업 육성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 ①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
- ② 축산사육환경과 방역체계 혁신
- ③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 저감
- ④ 국가·지역 푸드플랜 운영
- ⑤ 균형잡힌 국민 식생활 지원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 ① 3만불 시대, 살고싶은 농촌재생
- ②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③ 사회적 경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체계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

- ① 참여·현장 농정 추진체계 구축
- ② 지방과의 협력 농정 강화
- ③ 현장과 혁신의 FIRST 농정 추진

1.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1 | 쌀 등 식량작물 생산체계를 시장 수요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쌀 재고는 쌓여만 가고, 쌀 소비는 줄어들고, 쌀가격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농정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 쌀 중심의 수급 정책을 쌀 소비 촉진, 밭작물 자급률 제고와 농지 이용 효율화가 종합 연계된 식량작물 생산 안정화 정책으로 전환

* 밭작물 자급률 : ('16) 9.6% → ('18) 13.7 → ('22) 17.7

* 벼 재배면적 : ('17) 755천ha → ('18) 705 → ('19) 655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쌀수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 위주 논 활용, 쌀 공급과잉 구조 ○ 식생활 변화 등에 따른 쌀 소비 감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밭작물 자급률 제고 등 식량작물 생산안정화 ○ 소비패턴 변화에 맞는 쌀가루 및 쌀가공 산업 육성 |
| 품질 고급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확 위주의 품종·재배법·유통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중심의 생산·유통 기반 조성, 고품질 쌀 소비여건 조성 |
| 농지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 중심의 농지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제도와 농지은행 개편을 통해 농지이용 다변화 도모 |

[쌀 수급안정]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

- 쌀에서 타작물로 전환 시 평균 340만원/ha*을 보전하고, 조사료·지역특화작물 중심으로 추진하여 타작물 수급 영향 최소화

* 평균 단가 내에서 품목별 소득차, 영농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단가 차등화

- 2~3모작 작부체계 개발·보급, 기계화 촉진 등 연계 지원

□ **쌀 가공 산업 육성 등 쌀 소비 패턴 변화를 고려한 수요확대 지원**

* 「제2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 기본계획('19~'23)」 수립('18)

○ **식생활·가구형태·소비패턴 변화 등을 감안한 소포장(5kg 이하) 유통**

* 소포장 유통 시설 확충 및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포장 개발 등

○ **안정적 원료 공급을 위한 가공용쌀 특별공급(가격할인) 지속, 쌀가루 전용품종·제분기술 개발 등으로 쌀의 활용도 제고**

* 농협과 연계하여 쌀가루 판매사업 체계화, 규격 표준화 및 홍보·교육 강화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차기('18~'22년산) 목표가격 인상 추진**

○ **관련 법령(농업소득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부안 제출 및 국회 동의 절차 추진(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의견수렴(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 최소화

[품질 고급화]

□ **벼 품종 개발과 보급 방향을 다수확에서 품질 고급화로 전환**

○ **벼 유전자원 연구를 통해 밥맛, 특수성분 함유, 기능성 등 다양한 품질 목표 설정하고, '중장기 벼 품종 육성 방안' 마련(3월)**

* 농진청, 도 기술원, 학계, 업계 등 민·관 합동 '벼 품종 전문가 TF' 구성·운영

○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 비중 축소 및 고품질 종자공급 확대**

* 다수확 품종 비중 : ('17) 35% → ('18) 27 → ('19) 20

□ 벼 계약재배 확대, 재배방식 개선 등 생산단계 품질 개선

- 규모화·단지화된 RPC·들녘경영체 등을 중심으로 고품질 벼 계약재배 확대('17: 17천ha → '18: 20)
- 공공비축미 매입 시, 친환경 벼 시범 매입, 단백질 검사 기준 도입 및 지역별 대표 고품질 품종 매입 확대
- 친환경 벼 재배 확산 유도 및 질소 시비량 감축 등 품질 중심 재배매뉴얼 보급·교육 강화(3高3低 운동 전개)
 - * (3高) 밥맛, 완전미 비율, 쌀소비 / (3低) 질소질 비료, 재배면적, 생산비

□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및 수확 이후 품질 관리 강화

- 소비자가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기준을 개선하고 소비권장기한(Best before date) 도입검토 등 표시제 강화 추진('18.하)
 - * 싸라기 등 품위기준 및 단백질함량, 품종표시 등 품질 기준 표시 강화
 - *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시행('18.10.14. 이후)
- 단일품종, 우수등급 쌀에 대한 지원 강화(RPC 물량배정 확대 등)로 수확 후 고품질 쌀 가공·유통 확대 유도

□ 쌀 품질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고품질 쌀 소비여건 조성

- 쌀 품질 관련 다큐 제작, 대량 수요처(학교·단체급식 등)의 쌀 품질 표시(등급, 품종 등) 유도 등 추진
- 쌀 가공식품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양곡 원료공급 시스템 개선
 - * 도정공장 책임가공제, 정선절차 강화, 탱크로리 등 벌크공급 도입 등 검토

[발작물 자급률 제고]

- 쌀 생산조정에 따른 콩 생산 확대에 대비하여 수요 확대 추진
 - 콩 정부수매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량(TRQ 증량)은 최소화하고, 작황 등을 고려하여 '18년 수확기 추가수매(5천톤) 검토
 - * 정부수매량 : ('17) 30천톤 → ('18) 35~40 / 대두 TRQ 증량 : ('17) 53천톤 → ('18) 30
 - SPC* 선별·판매를 통해 수매 콩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기관(군·학교 급식) 등 대량 수요처 중심으로 국산 콩 소비 확대
 - * 콩 유통종합처리장(SPC) : 괴산, 문경, 파주 등 3개소 운영
-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산 밀 중장기 발전 방안'마련('18.2월)
 - 용도별 품종개발, 정부보급종 공급 확대로 품질을 향상하고, 대량 수요처 확보와 국산밀 의무자조금 도입 등 추진
 - * 국내 환경 적응 초강력분 품종 육성 과제 수행('18~'21, 농진청)

[농지 이용 효율화]

- 벼 중심의 농지 이용을 다변화하기 위한 농지 제도개선
 - 시설농업,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임대차 기간 연장(현행 최소 3년→ 5년)을 위한 농지법 개정 추진('18.하)
 - 주로 벼 재배지로 활용되는 간척지 중 염해지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사용 허용('18.하)
- 쌀 수급안정, 청년농 정착지원 촉진을 위한 농지은행 개편
 -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논)의 타작물 재배 의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1월)
 - * 벼 이외 작물 재배 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혜택 부여

2

수급안정 제도 강화 등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개선됐지만, 농산물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한 것이 큰 문제다.”

➔ 5대 채소 중심의 가격안정제를 넘어 경영비 수준을 보전해줄 수 있는 사전적 가격안정시스템 구축과 유통 혁신

*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 ('17) 생산량의 8% → ('18) 10 → ('22) 30

*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취급액 : ('17) 3.7조원 → ('18) 3.9 → ('22) 5.0

| 구분 | 현행 | 개선 |
|-------|-----------------------|---------------------------------------|
| 관리 대상 | ○ 5대 채소 위주 | ○ 과수·과채, 기타 품목까지 확대 |
| 주체/시점 | ○ 정부주도의 사후적 수급대책 | ○ 정부·지자체·생산자가 함께 수급 조절에 참여 사전적·선제적 대책 |
| 도매 시장 | ○ 경매중심 거래로 가격변동 완화 한계 | ○ 이미지 경매 등 거래제도 다양화 및 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원예농산물 가격안정시스템]

□ 정부, 생산자단체, 관측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수급조절체계 마련

○ 생산·출하 조절을 위한 중앙주산지협의회(노지채소, '17: 4개 품목 → '18: 11개 품목*)와 과수·과채 의무자조금 확대('18년 3개 품목)

* ('18년 추가) 고추, 대파, 생강, 당근, 토마토, 풋고추, 참외

○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물량 확대(고추, 대파 추가, '17: 8% → '18: 10)

* 계약물량의 50%까지 재배면적, 출하량 조절 등 이행의무를 농업인에게 부과하되, 농산물 가격을 평년의 80% 수준까지 보장

□ 수급조절 결정의 **정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빅데이터 기반 수급예측모델(BIGFOS), 드론 등 첨단기기 활용으로 농업관측 고도화
- 과거 재배면적, 소비트렌드 등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을 산출하여 생산량 조절을 유도하는 **생산예보제** 도입
- 생산단계(파종-정식-생육-출하)별로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기단계 기준 재설정***과 **대상 품목 확대**('17: 5개 품목 → '18: 8개)

* 수급조절매뉴얼 상 '하락심각' 단계에 생산중단가격(생산비+출하비 수준)을 반영하여 폐기 등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 원예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최소한 품목별 경영비 수준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영농을 보장하는 방안 검토('18.하)

* 품목선정 기준, 지원방식, 지원수준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유통 효율화]

□ (산지) 교섭력 강화를 위한 **기초 생산자조직 육성과 통합마케팅 확대**

- 공선·공동출하회 운영 우수 조직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참여 농업인 **출하물량 APC 우선 취급** 추진

* 농협 공선출하회·공동출하회 육성(누계) : ('17) 2,405개 → ('18) 2,500

-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통합마케팅조직 확대**('17년 110개→ '18년 115), 참여조직 **출하비율 확대**('17년 출하액의 40%→ '18년 42)

* 신규 통합마케팅조직 대상 산지유통활성화 금리인하(0.5%p), 3년 연속 통합 마케팅출하율 부진조직(15% 미만)은 산지유통활성화(옹자) 지원 중단

- 농협 경제지주의 품목단위 판매연합 조직을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생산자 가격교섭력 강화 및 책임판매 실현

* ('17) 2품목(마늘·토마토) → ('18) 5품목(풋고추·양파 등 추가)

□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기반마련

- 견본·이미지경매 등 ICT 기반 **상물분리**(商物分離)거래 확대('18.하)

* 전북지역 도매시장 등 희망 지자체 대상 실행방안 협의 후 추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맞춰 **시장도매인제 조건부 검토**

- 공정성·투명성 확보, 기준가격 훼손, 경매위축 등 시장도매인 도입 선결과제 해결방안 확보 후 추진(~'20)

- 도매시장법인 평가 환류조치 강화, 법인 지정 시 공통조건(파레트율, 안전성 검사 등) 마련 등 평가제도 개선('18.상)

※ 도매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18.12)

* 주요내용: 환경분석, 발전전략, 유통관계자 역량강화, 시설현대화 계획 등

□ (직거래) 중소농 판로 확보를 위해 유형 다양화 및 온라인 접근성 강화

* 직거래규모 : ('17) 3.2조원 → ('18) 3.3조원 → ('22) 4.2조원

- 대도시형 직매장, 1도 1대표장터 등 **농산물직거래 모델 개발**(각 1개소)

* (대도시형 직매장) 특별·광역시 등에서 운영되는 거점형 로컬푸드 직매장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 지자체 주관, 도내 생산 농산물 직거래 장터

- 온라인 전문협력사(벤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수 농가 발굴, 주요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 기획전 등 농식품 판로 지원(2억원)

- 농가, 영농조합법인 대상 **모바일기반 쇼핑몰 제작·보급**(5개소)

* '16년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판매액 비중 : 인터넷 45%, 모바일 55%

3

공익형 직접지불을 확대 · 개편하겠습니다.

“직불금 확대로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농업이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만큼 국가가 지원해야 해요.”

➔ 소득 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

* 밭 직불금 단가(만원/ha) : ('18) 50 → ('19) 55 → ('22) 70

* 직불제 개편 연구 및 이행계획 마련('18) → 개편안 확정 및 법령 개정('19~'21) → 시행('22)

| 구분 | 현 행 | 개 선 |
|-------|---|---|
| 정책 방향 | ○ 개방화에 따른 소득보전 | ○ 환경보전 등 의무를 강화하고, 공익 창출 효과를 보상 |
| 직불 단가 | ○ 밭 고정직불금 50만원/ha ○ 조건불리직불금 농지 60, 초지 35 | ○ 밭 고정직불금 55만원/ha ○ 조건불리직불금 농지 65, 초지 40 |

[직불제 개편]

□ 환경·사회적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불제 개편 방안 마련('18.하)

○ 직불제로 지원하는 공익의 수준(개념)*을 명확화하고 공익 창출 (public goods)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

* 공익개념(안) : 현재 관행농업 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적 편익

* 공익수준(안, EU 등 사례) : (기본공익) 환경·안전 등과 관련된 기초 의무

(부가적 공익) 유기농, 경관창출 등 특별한 공익

○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 직불을 '22년까지 통합하는 한편, 환경보전 등 상호준수의무*를 부과(기본공익)하고, 지원 확대

* 농업 생산과 관련한 환경·사회적 의무를 농업보조 지급 조건으로 부과

- 부가적 공익창출을 위해 **특정목적형 프로그램** 방식 도입
 - * (예시) 친환경·경관보전 직불 등을 (가칭)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
- 차질없는 직불제 개편(~'22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실행**
 - * ('18) 개편방안 마련 → ('19) 농업환경프로그램 도입 → ('20~21) 관계 법령개정 → ('22) 공익형 직불 전면 시행
- **밭 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 인상은 지속 추진***(ha당 5만원)하고, **변동직불제는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 (밭) '17년 : 45만원/ha → '18년 : 50 / (조건불리) 농지 55 → 60, 초지 30 → 35
- 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성을 완화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벼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 검토
 - * 연구용역 추진(~'18.7), 전문가·농업계 등 의견수렴('18.8~)

[직불금 조기지급 및 사후관리 강화]

- 직불금 조기지급에 대한 현장의 요구(수확기 지출수요, 명절준비 등)를 반영, **11월 이후 지급하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9월에 지급**
 - 이행점검 분산 추진*, 스마트팜맵 활용 등으로 이행점검 조기완료
 - * (현행) 6~9월 → (개선) 논이모작 : 3~4월, 밭고정·조건불리 : 5~6월, 쌀 : 6~8월
-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대책 추진 등으로 **제도의 신뢰성 확보**
 - * 최근 3년 간 부당수령 건수 : 856건 (착오·과실 682, 국유지 계약 미체결 144)
- 신규·관외경작자 등 **실경작 확인 강화, 신고 포상금 확대 및 부정신청자 제재강화 등 추진**('18.상, 「농업소득보전법」시행령 개정)

4

자연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망을 확충합니다.

“ 재해가 오면 비용도 못건지고 한 해 농사를 망칩니다. 재해보험을 내실화하고 재해복구비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 자연재해·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 기반 정비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17) 30.1% → ('18) 33 → ('22) 40

* 수리안전답률 : ('17 잠정) 61.4% → ('18) 62 → ('22) 66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재해 복구 | ○실거래가의 52% | ○실거래가의 66% |
| 재해 보험 |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가 과다 ○대상품목(농작물) : 53개 | ○보험료율 상한 설정으로 격차 완화 ○품목확대 : 57개 |
| 안전 보험 | ○최근 손해율 미반영 ○산재보험보다 낮은 수준 보장 | ○최근 손해율 반영으로 보험료 인하 ○산재보험 수준의 상품 개발 및 보급 |

[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 (복구지원) 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추진

○ 현장의 요구가 큰 농약대, 대파대 등의 지원단가 추가 인상 추진
(지자체현장 의견 수렴, '18.5)

* '18년부터 발생하는 재해는 '17년말 인상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강화

○ 농작물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연구용역 추진, '18.상)

* 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 병행(하반기)

□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농가부담 완화와 보장품목 확대

- 벼·사과·배 등 주요 품목 보험료를 상한선 설정으로 시·군간 보험료를 격차* 완화, 무사고 농가에 보험료 할인 확대(2월)

* (벼) 강원 철원 0.4%, 전남 진도 7.3, (사과) 강원 홍천 19.2%, 경기 양평 0.2

- 4개 품목 신규도입(기존 53품목 +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

- 병충해 보장 품목 점진적 확대('18년 고추 추가)

* 병충해 보장 품목: 벼(도열병, 벼멸구 등 4개 병충해), 감자(모든 병충해)

- 농작물 재해보험의 국가 재보험 운영 방식을 개편(초과손해율 → 손익분담)하여 민간보험사 과다이익 방지

* 기준손해율 초과시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방식에서 국가와 보험사가 손익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 '17년 재보험기금 210억원 추가 적립

□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 경감, 보장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

- 위험률 산출주기를 단축하여 매년 보험료 재산정(현행 3년 → 1년)

* '16년 손해율을 반영하여 위험률 재산정시 '18년 보험료 10% 인하 예상

- 간병·휴업급여 등 보상을 강화한 산재보험 수준의 신규상품 보급

* (간병) 5백만→ 50, (휴업) 1일당 2만→ 6, (재활) 5백만→ 30, (치료) 10백만→ 50

- 농작업 중 재해현황 분석*, 보험료 국고 지원비율 상향(50%→ 70)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연구용역, '18.상)

* 농작업 중 재해 원인 분석 및 재해로 인한 사망·상해자 수, 치료비용 등

[농업기반 정비]

□ (재해 대응) 가뭄 우려 지역의 항구적 용수개발과 배수개선

-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가뭄 극심지역(경기·충남·전남)을 대상으로 수계연결사업 확대

*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아산호-금광·마둔지 수계연결 착수('18.하)

- 강수·저수 상황을 상시 분석·예측하여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가뭄상황 모니터링, 가뭄우심지역 지도 작성 및 예·경보(매월), 영농기 가뭄우려 지역(남부지방) 용수확보대책 추진('18.6)

- 배수개선(2,778억원) 사업을 통해 상습침수피해 단계적 경감 추진

* 배수개선율 : ('05) 42.7% → ('10) 49.3 → ('15) 56.8 → ('18) 60.9

□ (안전 관리) 노후 수리시설의 기능 개선 및 보수·보강

-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확대된 내진보강 대상 저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진보강 추진('18.6~)

* (기존) 총저수량 50만^m 이상(602개소) → (변경) 30만톤 이상(1,241개소)

- 내진보강 대상 43개 저수지 개보수, 지진계측기 설치(53개소)를 조기 추진하고, 재난대응 매뉴얼 개정('18.3)

□ (물관리 과학화)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ICT에 기반한 물 관리 및 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25년)

- 물·시설 관리 계측시스템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모형 개발('18.12)

2.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1 |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 '18년 3만 3천개, '22년까지 17만개 일자리 창출
 - 농신보·자금, R&D, 벤처 창업, 수출 등 정책 지원

[청년 창업 일자리 : '18년 4.7천명, '22년 34천명]

-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등 식품·외식 분야 창·취업 역량 강화
 - 창업농 1,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와 연계하여 농지·자금·교육 등 종합지원*
 - *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 경영실습 임대시설 조성, 농신보 우대보증 확대 등
 - 식품·외식 메뉴 개발부터 매장 운영까지 실전 경험이 가능한 창업 공간 제공, 해외 진출 식품·외식기업 인턴·취업 지원

[3만불 시대 신수요 일자리('18년 5천명, '22년 49천명)

- 3만불 시대에 맞춰 반려동물·승마·농촌산업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유망 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 (반려동물) 동물간호 복지사 등 자격신설, 장묘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 펫사료 시장 창출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 (말산업) 승마시설('18년 14개), 말 조련센터(8개) 확충 등 고용 기반 조성
 - (농촌산업) 농촌관광해설사 양성('18년 제도 도입),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

[첨단 미래산업 일자리('18년 4.3천명, '22년 : 2.8천)]

- 종자·농생명 소재, 곤충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분야 개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국산우수품종 수출 확대, 기능성소재 7대 중점분야* 중심의 R&D 및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운영
 - * 천연 고분자, 향균, 건강증진, 사료첨가제, 동물백신, 생물농약, 친환경비료
 - 곤충종자 보급센터 구축 및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생산·보급기반 구축과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 사료개발 등 신규 수요 창출
 -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 개발로 과학역농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산림을 활용한 특화 일자리 '18년 19천명, '22년 60천명)]

- 산림 공공일자리 창출, 산림 전문가 양성, 산림자원의 산업화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산림가꾸기·도시 숲 관리 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지역의 목재·석재·임산물을 활용한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산림일자리 발전소) 신설
 - 산림 복지단지(휴양, 치유, 교육, 레포츠) 조성 및 숲 해설사, 나무의사('18.6월 시행) 등 산림 특화 전문가 양성

2

청년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농촌에 젊은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농촌을 누가 지킬 것인지..., 후계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 청년층이 영농 창업 전후에 겪는 소득 불안정, 자금·농지·기술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으로 전환

* 40세 미만 경영주 비중 : 현 추세 지속시 '22년 0.5% 수준 → 1.4% 이상으로 확대 전환

* 농업계 학교 졸업생 취창업률: ('17) 33.1% → ('18) 34.6 → ('22) 39.2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맞춤형 지원 | ○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 정착 애로 |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 | ○ 농지, 창업자금, 교육 등을 각 기관 개별 접수, 별도 선발 | ○ 농지·자금·교육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

□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지급('18.4~)

○ 영농계획서 평가, 심층면접을 거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의지,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갖춘 청년창업농(창업형 후계농)을 선발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로 재산 및 소득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 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 창업농에게 일정기간 영농종사, 교육 참여, 경영장부 작성 등 의무부여

□ 청년 창업농에게는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

- 2030세대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하고,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의 농지매입을 우대 지원하는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 사업* 신설**(‘18.1)
 - * 55세 이하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농업인 대상(최대 100명), 1인 1ha 이내에서 45천원/3.3㎡의 농지매입 지원(일반농가 35천원)
- 청년창업농 영농 경험 축적을 위해 **경영실습 임대시설 조성**(‘18.하)
 - * 3,000㎡ 규모의 임대농장 30개소 조성, 개소 당 3명 내외의 청년에게 임대
- 청년 창업농이 후계농 자금 대출 시 **농신보 우대보증 확대**(‘18.4)
 - * (현행) 보증한도 2억원, 보증비율 90% → (개선) 보증한도 3억원, 보증비율 95%

□ **농고·농대, 귀농, 비농업분야 등 경로별 청년 유입 확대**

- 한농대 입학정원 증원(‘17: 470명→‘18: 550), 교육과정 개편 및 입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에게 양질의 교육 지원
 - * 영농기반 미반영 전형 비율 확대(‘17 : 28% → ‘18 : 30 → ‘19 : 40) 등
- 증가하는 **귀농희망 청년들이** 다양한 품목을 실습 후 창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장기교육 과정* 도입**(‘18.3)
 - * 청년 귀농 희망자(50명)에게 6개월 과정의 실습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

□ **청년 창업농 법인화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등으로 성장 유도**

- **유한책임회사를 농업법인 유형에 추가하고**(~‘18.9), 농업법인에 대한 농림사업 지원 조건(출자금 1억원, 설립 1년 이상) **완화***
 - * ‘18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예외규정 신설(‘18.1)
- **모태펀드***를 활용해 청년 창업농 경영체에 대한 **투자 확대**
 - * 농식품 벤처펀드(‘18~‘22, 연 100억원 이상), 지역특성화 펀드(‘18년 100억원) 신설

3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농사일이 워낙 힘든 육체적 노동이라, 농촌에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 농업도 달라질까요?”

➔ 스마트팜을 선도 프로젝트로 기술개발-자본투자-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농업과 연관산업의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스마트팜 보급 목표(누적): ('17) 4,000ha → ('18) 4,510 → ('22) 7,000

*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 ('17) 58.3 % → ('22) 75.0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정책 대상 | ○ 기존 농가의 스마트팜 전환 중심 | ○ 새로운 인력의 유입 촉진 |
| 정책 범위 | ○ 농업 생산과 식품으로서의 농산물에 중심을 둔 정책 | ○ 밭농업 기계화 등 투입재 산업 육성 ○ 농생명소재 원료, 미생물산업 등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 |
| 기술 지원 | ○ 전문가, 원천기술 중심의 R&D | ○ 농업 현장 중심의 R&D |
| 자금 지원 | ○ 보조사업 중심의 정부 자금 지원 | ○ 모태펀드 등 민간투자 활성화 |

[스마트팜 확산]

□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창업보육) 창업보육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하고(3개소, '18.1), 청년 60명을 모집(18.3), 창업교육·경영실습 등 성장단계별 지원

○ (자금지원)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청년 창업농 농신보 우대보증, 농식품 벤처펀드 도입 등으로 창업 자금지원 강화

* ('18년 규모) 1,000억원, (대출금리) 시설 1%, 운전 1.5%,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 (희생지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농지·시설 매입 후 재임대, 경영희생자금 지원 등 창업 안전망 구축

- 스마트팜 단지 신규 조성(2개소, 총 40ha) 등 현장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 도입
 - 5대 채소(고추, 마늘, 무, 배추, 양파) 중심으로 노지 스마트팜을 시범 도입(5개소)하고, 새로운 작목 등 수직형 농장 모델 발굴(신규 3개소)
- 스마트팜 확산과 혁신창업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스마트팜 단지 기반조성과 같은 기존사업 연계, 민간 참여 프로젝트 발굴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조성계획 마련(~'22, 4개소)

[3만불 시대 새로운 수요 산업 육성]

-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여건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 (자격증 신설·공인) 동물간호 복지사 제도 도입, 애견 미용업, 펫 택시(동물운송업) 등 신규업종 영업 등록
 - (관련산업 체계화) 진료·장례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 마련 및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18년 2개소)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추진 등 펫사료 산업 육성
 - (제도 정비) '(가칭)반려동물 산업법' 제정 추진 등으로 산업 활성화 지원
- (승마) 승마대중화를 통한 한국형 레저 승마산업 육성 및 농촌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확대
 - (기반조성) 농어촌형 승마시설 환경개선 지원(연 10개소), 농어촌형 승마길 확대 설치*로 농촌 관광 승마 확대

* 농어촌형 승마길(누적) : ('17년) 57km → ('18년) 170 → ('21년) 500

- (저변확대) 자유학기제 승마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등 학생승마 지원
 - * 학생승마 : ('17) 44천명 → ('18) 69, 유소년승마단 : ('17) 44개소 → ('18) 80
 - (서비스 전문화) 승마지도사 국가 자격화, 말산업 종사자 보수 교육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승마상품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협력승마시설 운영
 - * 협력승마시설 : ('16) 31개소 → ('17) 62개소 → ('18) 80개소
- (新식품 분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변화에 맞는 식품시장 확대
-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시장 확대에 따라 신제품개발, 품질 관리를 위한 R&D 지원 및 소비자트렌드 분석 등 정보제공 강화
 - 식품산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마케팅 지원
 - 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육류 및 화학적 첨가물 등 기존 식품 원료·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식품 개발·지원
 - * 예시 : 대체 육류, 식물성 달걀, 인공우유, 곤충활용 식품 등
 - 식품첨가물, 식품용효소 등 바이오 식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산림) 산림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일자리 창출
- 산림복지서비스를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전문업으로 육성하고, 나무 의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양성 교육 시행
 - * 전문업 분야 확대 : ('17) 숲해설업 → ('18)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산림치유업
 - 임산물, 목재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 * 밤, 고로쇠 등 임산물과 목재를 특화하여 생산·유통·관광을 융합한 클러스터 육성
 - 산불, 산사태등 재해분야 인력확충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 산림재해 일자리(12.5천) 및 공공산림가꾸기 등 재정지원 일자리(2.1천) 확충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농업 준비]

- (종자산업) GSP(Golden Seed Project) 수출 목표('18년 3,868만달러)달성을 위해 개발품종의 수출지원 강화
 - (수출 지원) 국산 품종 홍보를 위한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를 개최(10월)하고, 해외전시포 운영(중국, 인도, 인니, 베트남, 멕시코)
 - GSP 참여기업과 수출지원 기관(aT, KOTRA 등)이 참여하는 '수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외시장 판로확보 지원
 - (역량강화) 종자 협력네트워크를 활용, 중소기업의 수출품종 개발 지원
 - * (농진청, 전주) 육종기술 개발,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정읍) 육종소재 개발 (종자산업진흥센터, 김제) 분자표지·기능성 분석서비스 제공
- (곤충·미생물) 생산농가 지원, 신규 수요 창출 등 시장규모 확대를 통한 곤충산업 발전 기반 마련 및 미생물 산업 육성
 -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18, 타당성조사) 등 생산·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식품 및 사료 개발 등 곤충자원 신규 수요 창출
 - * 익은누에의 알콜성 질환 예방 건강기능식품 개발('17~'20, 14억), 식용곤충 활용 반려동물 사료 개발('18~'21, 19억) 등 연구 추진
 -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 천연 살충제, 면역강화제, 축산악취 저감제 등 활용가치가 높은 미생물의 산업화 지원 확대
 - * 포스트게놈 미생물유전체 연구사업('18~'21, 283억) 등
- (생명소재) 실험실단계에 머물러 있는 소재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7대 중점분야* 등 산업화 중심의 R&D 지원 강화
 - * 7대 중점분야: 천연 고분자, 향균, 건강증진, 사료첨가제, 동물백신, 생물농약, 친환경 비료
 - * 농생명소재산업화기술개발사업('20~)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18.상)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 영농기반 확충]

- (첨단 농기자재) 자율주행 트랙터, 농업용 로봇 등 첨단농기자재 분야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한 과학영농 기반 확충
 - (개발)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 R&D 확대(농진청, 기업 중심) 및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8.9%), 수확(23.9%) 작업 기계화
 - 작업효율이 낮은 파종·정식기, 굴취형 수확기 성능 우선 개선('18), 굴취·수집 등 다기능·고성능 기계 개발('19~'21)
 - * R&D 투자 : ('17년) 83억원 → ('18년) 94, '19년 이후 매년 100억 이상 투자
 - (보급) 성능개선·첨단 농기계를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 지자체를 통해 주산지 공동이용조직에 집중 보급하여 농작업 기계화 촉진
 -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밭작물 농기계를 우선 보급, 국내 농기계 업체의 농기계 개발을 유도하고 고품질 농기계 생산 촉진
 - (수출 지원) 농기자재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중국, 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마켓테스트('18 신규, 4억원) 및 해외 농기자재박람회 참가 지원(4.5억원)
 - 국내 농기계, 농자재 수출확대를 위한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자재박람회』 개최(천안, '18.10.31~11.3)
 - * 격년 개최, ('16) 28개국 453개 업체 참가, 28만명 관람
- 빅데이터 기술 활용 기반 구축 및 스마트 유통시스템 도입
 -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분석할 수 있는 민·관 공동 플랫폼 구축
 - 농식품 빅데이터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핵심데이터 수집·제공
 - * 농경지 전자지도(팜맵)기반에 공공·민간정보(카드·통신사), IoT정보(스마트팜) 융합

- 스마트팜에서 생성되는 환경·생육·경영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가치 증대
 - * '17: 8품목, 210호 → '18: 19목, 240호 → '22: 10품목, 800호
- 돼지 영상 등급 판정을 통한 품질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종돈·사료·농가), 소비(이력관리·맞춤형 상품관리) 등 유통단계 전반의 스마트화 추진
 - * '17 : 1개소 시범도입 → '18 : 3개소

[현장중심 R&D 체계 구축]

- 농식품부 R&D 사업비 중 농업인·농산업체의 의무참여 예산 비중을 확대('17: 36%→'18: 42)하고, 이행점검 실시
 - 농업인·농산업체가 직접 연구기관을 선택하여 애로사항을 해결 하도록 바우처 방식의 R&D 지원 확대('17: 34억원→'18: 150)
- 현장의견 반영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조사 방식을 다각화하고, 찾아가는 설명회(4회) 등으로 현장소통 강화
 - 능력 있는 농업인·농산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제출서식 간소화, R&D 코디네이터*('18년 신규: 20명) 지원 추진
 - * 퇴직 연구자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 작성·연구방향 점검·진도관리 등 지원
- 미래농정과 현안해결을 위한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핵심과제 뒷받침을 위한 신규 R&D과제 기획
 - * 발농업 기계화, 기능성 식품, 가축질병, 농식품 안전, 농기자재 국산화, 소재, ICT 융복합
 - '18년 「4차 산업혁명의 농업접목」 과 「동·식물 질병 확산에 체계적 대응」 신규 R&D 사업 기획 추진('18.상)

[민간 투자 활성화]

- (모태펀드) 민간자본의 농업분야 투자 유치 및 창업기업 생태계 조성
 - 농업분야 혁신성장 지원 및 지역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 (농식품벤처펀드) 혁신모험펀드와의 공동 출자*를 통해 스마트팜 등 5년 이내 창업 경영체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 * 농식품 모태펀드 100억원 + 혁신모험펀드(중기부 등) 연간 100억원('18~'20)
 - (지역특성화펀드) 지역특성화 사업과 연계, 지자체·정부가 공동 출자하여 우수 농식품 경영체 발굴·지원('18년 100억원 결성)
 -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단계에 따른 단계별·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투자 前) 예비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농업법인 등 대상별 맞춤형 투자금융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제공 등
 - (투자 後) 투자받은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 국내외 마케팅 및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5월 상해, 8월 베트남), 국내외 마케팅 상·하반기 1회
- (농신보) 금융위와 공동으로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 마련(~3월까지)
 - 시설투자비 상승을 감안하여 동일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소액 대출자 지원을 위한 전액보증 한도 상향을 검토
 - * (기존) 개인 10억원 / 법인 15억원 → (개선) 개인 15 / 법인 20
 - 스마트팜·ICT융복합 사업자에 대한 예외보증 지원을 확대 (개인 30억원, 법인 70),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3년 이내) 농업인·농업 법인에게 부분보증 비율을 상향 적용(현재 85%)하는 방안 검토

3

세계와 경쟁하는 식품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식품산업 발전이 농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당 창업을 위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과의 연계 성장을 넘어 식품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외식분야의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추진

* 식품·외식분야 취업자 수 : ('16) 254만명 → ('18) 265 → ('22) 289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혁신 인프라 | ○ 영세한 산업구조로 식품·외식 기업의 경쟁력 취약 | ○ 미래유망분야 집중 육성, 청년 취창업 지원 등 혁신성장 도모 |
| 농업 연계 | ○ 국산원료 사용비중 증가세 둔화 | ○ 국산원료 사용의 지속적 사용 유도를 위해 수요자중심 정책발굴 |
| 수출 | ○ 주력시장(미·일·중)위주 수출지원 | ○ 新남방정책 등 수출 다변화 추진 |

[식품산업 기반 강화]

□ (취·창업 지원) 실습형·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통해 식품·외식 분야에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임차료 부담 없이 창업기획, 매장 운영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확대

* 사업 개소수 및 지역 확대 : ('17) 1개소(서울) → ('18) 5개소(전국)

○ 청년인력이 식품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턴십을 확대 ('17:43명→'18:65명)하고, 기업탐방, TED형 강연 등 프로그램 운영

-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 청년인턴 파견(50명)

○ 국가식품클러스터 內 '창업지원 Lab'('17년 4개팀→'18년 16)으로 가공식품 시제품제작 및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역량있는 청년들이 해외 진출 한식당 및 외식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18:40명)하고,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 운영(100명)
 - * 농식품 수출 선도기업과 1:1로 매칭하여 신흥 수출시장에 파견(3개월)

- (유망분야 육성) 기능성식품시장 확대를 위한 (가칭) 기능성식품 표시제* 신규 도입방안 마련
 - * 간소화된 절차(신고)를 거쳐 식품 제조자책임하에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확인된 원료·성분을 활용한 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 선진국(일본 등)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기능성 식품표시제를 설계('18.12)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소재별로 연구결과(기능성·안전성) 등을 취합·제공하는 '기능성 농식품 DB'를 구축('18.11), 기업의 기능성 소재 탐색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상시 애로대응 시스템 구축
 - * 익산소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업체(누계) : ('17) 50개사 → ('18) 75

- 산학연 전문가의 기술 애로 진단과 세무, 인허가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소' 운영('18.3)
- 클러스터 중심으로 식품 R&D벨트(국가식품클러스터-한식연-농진청 등)를 조성하고 지역 우수인력과 입주기업 간 일자리 연계

- (규제 합리화) 식품·외식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개선
 -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외연을 확대
 - *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지역특산주 주종 확대(지역농산물 활용 맥주, 브랜드 포함) 등

[농업과의 연계 강화]

-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 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이행보증보험*을 도입(3월)하고,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확대
 - * 보험가입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 국산 농축산물 신용구매 가능
 - ** (우수사례) 황등농협(전북 익산) - CJ 프레스이웨이와 즉석밥용 벼 계약재배 : ('15) 2ha → ('16) 240ha → ('17) 500ha → ('18) 1,000ha(예정)
- 식품업체-생산자단체 간의 계약재배로 농산물을 조달하는 생산단지에는 재배·수확·제품개발 등 지원
 - * (생산자단체) 병해충 공동방제, 장비 임차, 시범포 운영, 재배기술 교육 등
 - (식품업체)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상품성 테스트 지원 등
-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식품 가공용 품종 개발을 확대하고 분산된 가공적성정보를 통합(가공적성정보센터)하여 식품업체에 제공
 - * 쌀·메밀·고추 등 44품목에 대한 가공적성 연구 및 논문·특허 등 정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 농업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수단 제공
 - 우수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스타기업)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선택하고, 지원(업체당 1~2억원) 받는 '자율선택형 바우처' 도입('18.3)
 - * 경영·컨설팅, 포장·디자인, 마케팅·판로지원, 기술개발·연구 등
- 지역 식재료 사용 현황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 우수 외식업 지구를 발굴·홍보(年 5개소)함으로써 외식업 성장과 농가 소득을 연계
 - 중앙정부 주도의 지구 육성을 지양하고, 지자체 및 민간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외식산업진흥법, '18.상)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17:20개소→'18:40) 및 레스마켓 설치를 확대하여 농가 및 외식업체 동반상승 도모

[한식 및 전통식품 진흥]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K-Food Plaza'를 설치·운영('18.2)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 집중 홍보('18.1~3)
 - 국내 우수 한식당 가이드 책자 배포(2만부)와 KTX 한식 홍보를 추진하고, 평창 및 강릉 선수촌에 국내산 한식 식재료 공급
 - * 선수촌 급식업체에 '건강한食서포터즈'를 파견하여 한식 알리미로 활동
 -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외 식품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보 교류의 장(Food Summit)을 마련하고, 국내 한식문화 홍보 병행
- 해외 우수한식당 인증제 시범 도입(10월)으로 해외 한식당 품질을 제고하고, 체계적 한식정책 추진* 기반 마련(한식진흥법 제정, '18.11)
 - * 한식정보체계 구축, 전문인력양성, 우수한식당인증,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20)하여 우수 토착 발효종균 보급 확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 도모
 - 유용한 균주를 보유한 기관과 전통식품업체를 연계, 제품화 지원
 - * 연간 450톤 규모의 종균생산 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자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18.2월)하고, 술 전문 연구지원 기관으로 '(가칭)한국술 연구소' 설립 추진(~'21년)
 - * 일본은 주류총합연구소(독립행정기관)를 통해 주류 연구·조사, 주류정보 제공
 - 제조기술·미생물 등 양조기반을 공고화하고, 소규모 업체의 생산·유통 역량 제고

[농식품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 (시장 다변화) 기존 주력시장(일·중·미)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신시장 적극 개척
 - 정부-민간 간 협력을 통해 기획수출*을 확대하고, 기 진출한 국내 대형 유통망을 활용하여 동남아 지역 수출 확대(新남방정책)
 - * (사례) 한·미얀마 위생검역협상에 대비, 수입통관 실적 확보를 위해 우리 신선농산물의 미얀마 수출을 전략적 지원(바이어 매칭, 통관지원 등)
 - 파일럿요원(aT), 시장개척단(업체+전문가) 등을 성장 잠재력이 큰 다변화 전략국가에 사전 파견하여 정보수집 및 체계적 전략 수립
 - * (동남아) 대만·말련 (중동·중앙아) 카자흐 (유럽) 폴란드 (중남미) 브라질 (아프리카) 남아공 등
-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 패키지로 지원받는 수출바우처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브랜드 육성, 해외인증(Global GAP, ISO 22000 등), 수출컨설팅, 해외관측, 바이어상담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신선농산물 수출) 박람회·해외관측 및 해외인증 지원 시,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농식품 사용 업체를 우대
 -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집중 육성을 위해 해외마케팅, 수출물류비 등 지원체계를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개편
 - * ('17) 버섯류 → ('18) 파프리카, 딸기 → ('19) 배, 토마토, 포도 → ('20) 사과, 복숭아 → ('21) 멜론 → ('22) 배추, 양배추 → ('23) 감귤 등
- (해외진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One-Stop 지원
 - '글로벌외식기업협의체'를 통해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식재료 수출 인증 지원 등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종합 지원

3.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1 농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겠습니다.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했으면 좋겠다. 안전한 먹거리 강력히 원한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 사후 수습 위주의 안전관리를 사전예방 생산체계 구축으로 전환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던 인증제도 전면 개편

* 소비자의 농축산물 안전 체감도 : ('17) 54.8% → ('18) 58.5 → ('22) 70

* GAP 인증 농가비율 : ('17) 8.1% → ('18) 9 → ('22) 25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인증 제도 | ○ 축산물 살충제 관리기준 부재 등 위생·안전 기준 미흡 | ○ (친환경) 안전관리 기준 도입, 검사·위반행위 처분 등 강화 ○ (HACCP) 기준에 살충제 항목 추가 |
| 안전 관리 | ○ 출하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집중 ○ 통합 먹거리 안전관리체계 부재 | ○ 생산요소에서 출하까지 통합적 안전관리 ○ 범정부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

[농장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토양·물 등 생산단계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점 관리

○ 안전한 농경지 관리를 위해 폐광산, 산업공단 등 오염우려 지역의
중금속 잔류조사 강화 및 농경지 비옥도 관리

-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농경지는 재배 농산물까지 추가 조사 추진
(기준 초과 농산물은 폐기 조치)

* 오염우려 농경지 중금속 조사 : ('17) 3,700필지 → ('18) 3,900필지

- 유기질 비료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
등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산성화 방지

○ 수질기준 4등급 초과 저수지 수질 개선 추진('18년 누적: 31개소, 252억원) 및 농업용 관정 수질 관리 강화

* 중금속 우려 저수지 수질조사(연1회 → 4회), 공공관정 수질검사(매 3년), 폐관정 점검 강화(연1회 → 2회), 공공관정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18년)

- 중금속 기준 초과 저수지는 급수 중단, 대체 급수 및 정화 조치

* (예시) 천안 입장저수지 비소 기준 초과로 급수 중단 등 대응('15)

□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PLS) 도입('19년~)에 따른 제도정비

○ 등록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용 농약 직권등록을 확대('18.하, 1,600여개 등록 예정)하고,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농약 이력관리제 도입

- 농약 판매 시 농약 바코드 정보와 경영체 등록 정보를 연계관리해서 원예, 가정용 농약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 기록 의무화

* 농약관리법 개정('18), 농약 이력관리시스템 도입('19~)

○ 농약 판매관리인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 및 안전 교육** 강화

* 농약·병해충 방제 관련 경력이나 자격 소지자로 한정(신규 진입자)

** 민간에서 운영되던 이수 의무교육을 공공 교육으로 전환(농진청)

○ 고령·영세농 등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방문, 우편 등), 콜센터 운영 등 PLS 시행 대비 교육·홍보 강화

* 농업인 콜센터 : 1544-8572, 임업인 콜센터 : 1600-3248

□ 친환경 인증기준 내 안전관리 기준 확충, 사후관리 강화('18.상)

○ 인증기준에 환경오염 방지,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 도입

* 농장 주변 오염 방지, 수확작업 전후 개인 및 작업장 위생관리 기준 등

- 농약 등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삼진아웃제 도입, 상습 위반자에게 과징금 부과 등 처분 강화
 - * 삼진아웃제 : 인증취소 처분을 3회 받은 농가는 친환경 인증에서 영구 퇴출
 - 인증기관의 인력 기준 강화, 3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 취소 등을 통해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
 - * 축산물 인증 시 축산·수의분야 자격 의무, 인증심의관 교육·평가 강화 등
- GAP 인증제도를 내실화하고, 수요 확대를 통한 인증 참여농가 확대
- GAP 단체인증(전체 인증의 90%) ‘내부 심사제*’를 도입하고, 인증 기준 및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18.하)
 - * (현행) 2단계(서류·현장심사) → (개선) 3단계(단체 내부심사, 서류·현장심사)
 - 유통업체 자체 품질기준에 GAP를 적용하도록 민간 협업(MOU, 협의체 구성 등)을 강화하여 농가의 GAP 인증 참여 유도(‘18.상)
- 부처간 협업 등 안전관리체계 및 관련 법령 정비
- 범정부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중앙부처-지자체간 식품안전 소통 채널 구축, 대국민 소통 거버넌스 운영 등 안전관리체계 정비
 - 농경지, 용수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 안전관련 법령 정비(‘18.하)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 농가와 판매자 준수 의무 도입 등 살충성분 농약 관리 강화
- (농가) 안전 사용기준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18, 식약처 협조) 및 축산업 허가 취소 도입(‘19)
 - 방제 우수사례를 포함한 현장 매뉴얼 보급, 농가 교육 강화(연 2회)

- (판매자)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에게 거래내역 기록 및 적정 사용법 고지 의무화('18)
- (검사·기반) 산란계 농장 계란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산란노계는 출하 전 검사 실시(검사인력·장비 확충)
 - * 검사장비 보강('17: 42억원 → '18: 160)과 담당 공무원의 계란·산란노계에 대한 조사권 강화(출하중지 등 긴급조치, 정보공개 권한 등)

□ HACCP 단계적 의무화, 공동 방제 등을 통해 위생적 사육환경 조성

-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농장·종축장부터 단계적 의무화('18.12,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 * 타 축종은 경제성 평가 등 연구 용역을 거쳐 탄력적으로 의무화 적용
- 해충 방제 전문업체를 활용한 공동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문 방제업(가칭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등 방제서비스 확대
 - 소규모 산란계 농장(5만 수 미만) 대상 축산업 전문방제 시범사업 추진(40개소, 7.5억원)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18.10,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하고, 방제 기술 실용화 연구 지원('18, 12.8억원)
 - * 진료행위 등 타 법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축사 청소·소독, 진드기 방제 등에 한정

□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항생제 품목을 '20년까지 40종으로 확대('18년 32종)하고, 무항생제 인증제 관리 강화

- 무항생제 축산물을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되 항생제 사용 저감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인증으로 운영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에 소 생애 항생제 사용금지 원칙 적용
- 내성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생산자 대상 교육 및 지도점검

2

사육환경과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닭을 키우니까 살충제 제란 사태, AI가 발생합니다. 축산업 바뀌어야 합니다.”

➡ 성장 중심의 축산업을 생산단계에서부터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고, 공정 경제에 부합하는 지속성장 가능하도록 전환

* '18년에는 산란계 사육환경 집중개선, '19년부터는 나머지 축종 개선 추진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사육 환경 | ○밀식·밀집 사육, 시설·관리기준 미흡 | ○사육밀도·시설·관리 기준 강화신설 |
| 경쟁력 제고 | ○ICT 등 활용 초기 단계 ○가금 유통체계의 안전성·투명성 부족 | ○스마트축사 확대로 생산성 향상 ○달걀 세척·냉장 유통 확대, 닭고기 가격의무공시제 실시 |
| 방역 | ○체계적인 AI 예방 미흡 ○농가의 방역 전문성 부족 | ○새로운 방역 관리 프로그램 도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활용 확대 |
| 계열화 | ○계열화사업자의 계약 농장 관리 미흡 | ○계열화사업자 방역 책임,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

[축산 사육환경 근본 개선]

- 사육 밀도 기준, 시설·관리 기준 신설·강화로 축산업 허가제 보완
 - (사육밀도) 산란계 사육밀도를 낮추는 기준을 설정*(7월)하고 기타 축종도 조사를 거쳐 사육밀도 완화 추진(~12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
 - * 산란계 사육밀도를 0.075㎡/마리(현행 : 0.05)로 완화(신규 농가는 '18.7월부터, 기존 농가는 '25.7월부터 적용)
 - (시설 기준) 악취 저감 및 분뇨 신속 처리, 차단 방역 등을 위해 강화된 시설 기준 설정(연구용역 후 법령 개정안 마련, 12월)
 - (예시)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악취저감시설(예 :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설치 의무화

- (관리 기준) 가축사육업자에게 축사·가축의 위생관리 의무 부과
 - 사육시설·가축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 출입자 제한 의무, 관계자 출입시 작업복 및 신발 착용 의무 등 신설('18.7)
 -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및 밝기 기준 준수 의무, 가축 건강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 등 부과(~12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
- 축산 정책에 공간적 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축산 입지 개편
 - 가금 밀집사육지역 내 농장 간 일정 간격(500m 이상)이 확보되도록 이전, 인수·합병·법인화 유도 및 시설개선 지원
 - '18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가금 밀집사육지역 재편 계획 수립·확정(9월)
 - 철새도래지 인근 3km,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500m 내 신규 가금(닭·오리) 사육업 허가 금지(축산법 개정, 상임위 계류 중)
- 사육환경 개선 촉진을 위해 시설 개선과 시장 차별화 지원
 - 강화된 허가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개보수·신축에 대해서 축사 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보조율도 상향(연중)
 -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노력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표시제 도입('18.하)
 - 대형 유통업체, 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된 기준에 따른 축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18.하)
 - 축산 농가 점검 체계 개선, 축산 관련 법령상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재정사업 지원 제한 등 정책 추진 체계 재설계 방안 마련('18.하)
 - 농가별 체크리스트 관리, 중점관리대상농가 지정, 사육환경관리 요원 지정,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 추진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안전성 확보와 가격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의 요구에 맞도록 축산물 유통·가공 제도 개선
 - (달걀)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세척·냉장 유통 확대 지원
 - *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신규 추진('18 : 신축 2개소, 증축 2개소)
 - ** 계란가공장·집하장·등급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저온창고, 냉장차량 등 냉장 보관유통체계를 위한 시설지원
 - (닭고기) 계열화사업자가 판매가격을 농식품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는 닭고기 가격 공개* 추진
 - * 닭고기 가격 의무공시제 도입(「축산계열화법」 개정, ~'18.6)
 - (쇠고기)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제를 보완(하반기), 사육 장기화로 인한 지방량 증가(도체중 감소)를 방지하고 소비 트렌드에 부응
-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돼지 품종 개량 지속 추진
 - (한우) 후대검정두수, 후보씨수소 선정 확대 등 한우 개량의 효과성 향상으로 출하월령과 도체중 개선('15: 31.2개월, 436kg → '25: 28, 455)
 - * 후대검정두수 : 6두('16년) → 10두('20년), 후보씨수소 60두→ 90두
 - (돼지) 종돈장간 정액을 교환하는 개량 네트워크 사업 강화를 통해 한국형 두록* 육성 및 돼지 생존산자 수 증가('15: 12두 → '25: 13)
 - * 외국에서 개발한 두록 품종에 한국 고유의 유전자(예시: 흑돼지 유전자) 삽입
- '22년까지 ICT 활용 스마트 축사 5천호를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
 - * 스마트 축사 보급(누적) : ('17) 750호 → ('18) 1,350 → ('22) 5,750
 - 축사 환경관리, 가축 사양관리, 경영분석 등을 위한 ICT 장비 도입 지원(ICT융복합확산사업, 연중)
 - ICT 장비 표준화(12월)로 축산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마련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

- 올림픽 대비 강원도 소규모 농장 등 방역 취약대상 점검 및 관리 강화
 - 올림픽 종료 시까지 모든 전통시장(26개소)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가금 도축장 소독 점검 등을 위한 인력 배치
 - 경기장 소재 등 6개 시군에 방역 전문인력을 파견(검역본부 12명), 방역기술 컨설팅, 방역실태 점검 등 지원
 - * 경기·강원·충북도 15개 시·군에 30명 특별방역단 배치

- AI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역 관리 프로그램 도입
 - 소규모 가금농가 대상 가축거래상·도축장·전통시장 등을 등록·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 시범실시('18.3)
 - '19년부터 동 프로그램 미가입 시,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으로 산 가금 유통 불허('22년부터는 산 가금 유통 원칙적 금지)
 - 전업규모 가금농가 대상 '가금 자율 방역 프로그램' 마련 및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18.6)

- 구제역 백신 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백신 일제 접종을 정례화하고, 백신의 국산화도 차질없이 추진
 - 전국 소·염소 일제 백신접종(연 2회 : 4, 10월) 실시
 - 돼지는 동절기 이전에 과거발생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일제 접종하되, 항체양성을 제고를 위해 백신접종 프로그램 개선('18.2)
 - 구제역 백신 국내 제조시설 건립 추진('18~'19)

[축산계열화사업 제도 개선]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장의 방역 실태를 점검토록 하는 등 방역 책임 강화('18.6월, 「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등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후, 위탁 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
 - 계열화사업자의 계약농장에서 AI 발생 시, 모든 계약 농장에 대해 일시(48시간 이내) 이동중지명령 발령('18.상, AI SOP 개정)
 - 계열화사업자에게 수의사 채용(또는 위촉) 의무 부과
-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리는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18.6, 「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열화사업자 의무 등록제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사업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제 시행 및 평가결과 공표 추진
 -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정부에 등록하고, 계약 전에 계약농가에 사전제공토록 개선
 - 계열화사업자별 계약농가협의회 설치 및 협의 의무화
 -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 피해 시, 사업자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소유권, 계약 농장 평가 방식 등 세부 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 마련(상반기)
 - 전문가 T/F 운영, 연구용역(~3월) 등을 통해 불공정 해소

3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저희 집 옆에 축사가 있어 냄새와 소음이 심하여 고통스럽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시끄럽고 냄새가 심합니다.”

➡ 농산물 중심의 친환경농업 정책 범위를 생태·환경보전까지 확대 하고, 악취, 분뇨 등 축산업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환경 부담 저감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 : ('17) 5.0% → ('18) 5.2 → ('22) 8.0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누계): ('17) 1,029호 → ('18) 1,750 → ('22) 5,000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정책 범위 | ○ 개별 농가단위, 농법 중심 정책 | ○ 지구단위로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입 |
| 친환경 농업 | ○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 ○ 저투입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
| 친환경 축산 | ○ 분뇨자원화시설 악취방지 중심 | ○ 농장 및 광역단위 악취개선 지원 ○ 양분총량 관리 등 근본대책 검토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구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환경보전 활동을 이행하는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

○ 실증연구 지구를 선정(3~5개소), 시범 추진을 통해 프로그램 구체화('18)

○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스스로 관리계획을 수립

- 지역의 영세 고령농,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

* 영농·생활폐기물 수거, 전통농법·농업경관 보전, 공동공간에 화목·초화류 식재, 농업 및 공동체문화 유지·계승, 생태교란 식물 제거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생산) 저투입 생산기반의 확충을 통해 환경친화형 농업 유도

- 환경친화형 농업 실천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3년) 폐지

* '17년 대비 품목별로 논 10만원/ha, 채소·특작·기타 10, 과수 20 인상

- 친환경농업 지구를 확대('18: 12개소)하여 생산기반 규모화

- 지역별로 특화된 저투입 농법 개발·보급을 위해 연구센터 확충

*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10개소 건립('08~'18, 준공 8, 조성중 2)

□ (유통·소비) 다양한 유통채널 확충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 친환경 공공급식, 직거래·홈쇼핑·온라인 등 다양한 판로 확충

* 서울시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MOU 체결(2월), 직거래 장터·홈쇼핑 런칭 지원(4개소), 온라인몰 입점 지원(2억원) 등

-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매장을 확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가치 소비에 인센티브 부여

* 친환경 생활 실천 시 포인트를 적립하고, 초록마을('17), 이마트·농협 하나로유통·올가홀푸드('18 예정) 등에서 사용

- 물류센터 활성화 및 광역단위 산지 유통조직 확대('17: 1개소→ '18: 4)

□ (가치확산) 친환경농업의 환경·생태보전 기능 확산

- 안전성 중심의 친환경농업 개념을 토양·생태계 건강의 유지·증진 기능까지 확대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중심으로 소비자 홍보·교육 확대

* 소비자 접점 매체를 통해 가치 홍보, 초등학생의 친환경 현장체험 지원 등

[양분 · 악취 문제 개선]

- (농장관리) 악취 민원이 많은 중점 악취지역(19개)을 중심으로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확대('18년 3개소, '22년까지 총 23개소)
 - * 광역단위로 시설 개선,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 가축분뇨처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특별관리 농장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강화
 - 축사에 악취측정기를 설치('18년 45개소)하고, 축산악취관리센터(축산환경관리원)에서 ICT를 활용한 악취 모니터링 추진
 - 사후 관리강화, 지정 기준 보안을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18: 750개소)
 - *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컨설턴트 등 활용, 철저한 사후관리

- (기반 · 제도) 분뇨 처리 기반을 확대하고, 농경지에 투입되는 양분의 총량을 관리하는 **양분관리제 도입 검토**(환경부 협조)
 - 대규모(1일 70톤 이상 처리) 공동자원화시설 액비 성분 분석기('18: 9개소) 및 부숙도 판정기 보급 확대('18: 20개소)
 - * 공동자원화시설에 악취 측정기 설치 의무화
 -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해 양분수지 산정방법(양분부하계수 등)의 표준화를 통해 지역별 가이드라인 제시(연구용역 추진)
 - 양분관리제 시행 지자체에 공공처리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매몰지 사후관리) 기존의 매몰 방식을 랜더링(고온 분쇄) 등 소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기 조성된 매몰지 환경관리 강화(연중)
 - '10~'11년 조성된 4,751개 매몰지 중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매몰지부터 순차적으로 **발굴·소멸처리**('18년, 940개소)
 - 랜더링 시설(1개소), 이동식 소각·열처리 장비(20대) 지원('18)

[무허가 축사 적법화]

- (축산농가) 지역상담반, 자금지원 등 적법화 적극 지원
 - 지역상담반, 정부합동 점검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현장 컨설팅 지원
 - 시설비, 설계비, 측량비 등 적법화를 위한 자금 지원
 - * 시설개보수, 측량비, 설계비 등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비용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지원
 - 시·도별 가능인력을 조사하여 건축사의 지역별 안배 유도 (건축사 협회, 농협)
 - 축산단체장 간담회 등으로 적법화 이행 독려 및 공감대 형성
- (관계부처) 중앙 TF 등 관계부처 협업 강화로 적법화 이행 지원
 - 무허가 축사 축산농가 중 노력하는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환경부와 협의하여 노력하는 농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적법화 추진을 위한 대안 강구
 - 현장 애로사항, 부서간 이견 사항 등은 중앙TF에서 해결·조율
 - 검토결과는 해당부처에서 지자체 담당부서로 통보토록 조치
 - 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등 적법화 대안 협의
- (지자체) 시·도부지사 영상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협력 강화
 -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협조 요청
 - 시·도부지사 영상회의를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독려
 - 지자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 운영으로 원스톱 민원처리

4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직접 생산하여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에 대해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로 생산자-소비자 상생 구조를 만들고, 먹거리와 관련된 아젠다를 종합 조정·관리하는 푸드플랜 수립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 ('18) 8개 지자체 → ('22) 100개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정책 관점 | ○ 효율성 중심의 산업적 관점 | ○ 안전·신선한 먹거리와 상생·환경·복지 등 통합적 관점 |
| 거버 넌스 | ○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 위주 생산자-수요처간 거버넌스 부재 | ○ 민관협의체 구성과 생산-소비 아우르는 푸드플랜 마련 |

[국가 푸드플랜]

□ 정부·생산자·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핵심아젠다***를 설정하고, 세부 실천과제 구체화

* 모든 사람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보장, 국민 식생활·영양 개선, 환경보전형 농식품생산 확대, 먹거리 생산기반 관리, 로컬푸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 국가 푸드플랜 마련을 위해 **부내 전담 T/F**를 구성('18.1)하고, 식품 안전·복지·영양균형 등 세부 정책프로그램 구체화(연구용역, ~'18.9)

□ 관계부처 간 협의, 대국민 토론회, 지역 푸드플랜과의 상호 피드백을 거쳐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확정('18.12)

[지역 푸드플랜]

- 지역 유형별(농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로 선도지자체를 선정(8개소)하여 지역 푸드플랜 구축 시범사업 실시('18.1~)
 - (계획수립 연구용역) 지역 내 먹거리 심층 실태조사*, 맞춤형 조달체계 구축, 정책과제 구성 등 지원
 - * ① 농가별 품목·생산규모·인증현황, ② 유통업체 현황·취급량·품목, ③ 급식, 직매장, 소매점, 마트, 가공·외식 분포현황 및 취급량 등 조사
 - (교육) 지역 공무원, 영양사 등 관계자 이해도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해 지역 푸드플랜 강의·워크숍 실시
 - (거버넌스) 지역 내 합의를 통한 먹거리 과제도출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공청회 개최 지원
-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 개발·보급(~'18.11)
 - * (농촌형) 군소 시·군 수요통합 모델, (도농복합형) 먹거리 지역순환 모델, (도시형) 먹거리 보장형 도-농 공급협약 모델 등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기초모델을 정립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함으로써 우수사례 공유·확산
- 지역 푸드플랜 운용 시 요구되는 물류시설, 직매장, 안전성검사 등 관계부처·유관기관의 관련 재정사업을 포괄지원('18.10~)
 - 원예산업융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 상 투자계획을 푸드플랜에 포함시키고 향후 동 계획을 푸드플랜으로 대체(~'19년)
- 「농산물 직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 및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명시(~'18.12)

5

국민이 균형잡힌 식생활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골고루 음식을 먹도록 하는 교육이 늘었으면”

➡ 과일간식 등 건강한 먹거리를 경험함으로써 균형잡힌 식습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개선

* 국민 식생활 만족도(%): ('15) 42 → ('18) 43.5 → ('22) 50

* 과일간식 지원 학생 국산과일 선호도 증가(%p) : ('17) - → ('18) + 5 → ('22) + 20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식생활 교육 | ○ 학교현장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정책 접근 부족 | ○ 식생활교육과 연계한 제철 과일 간식 제공(주 1회) |
| 식품 복지 | ○ 소득계층 간 영양격차 지속 | ○ 농식품 기부활성화, 농식품 바우처 도입 등 국민 영양안전망 구축 |

[학교 과일간식 지원]

□ (기반조성) 학교 과일간식 지원 관련 법적근거 등 마련('18.2)

○ 학교 식생활교육 지원 시 과일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 과일 품질기준, 대상 학교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국단위 공모로 적격 가공업체* 풀(pool) 제시('18.3)

* 공고일 현재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업체 중에서 심사하여 선정

□ (간식지원)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전체 24만여명) 대상 과일간식 제공('18.4)

* 지자체의 추경예산 편성이 지연될 경우 9월부터 공급

○ 1인당 150g*의 조각과일을 컵과일 등 신선편이 형태로 HACCP 인증시설에서 가공하여 공급(학생 1인당 주 1회, 연간 30회)

* WHO가 권고하고 있는 11~18세 1회당 과일공급량(100~150g) 적용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확산]

- (식생활 교육)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단위 식생활 교육모델 구축 등으로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확산
 - 초등학생 대상 식습관 교육(식습관 학교 운영) 등을 확대하고, 교육 현장(어린이집·학교 등)에 실용적 콘텐츠* 및 교안 보급
 - * 어린이집 ‘텃밭·미각교육’ 지원, 영유아·초등학생 농업·농촌 체험교류 지원 등
 -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 연구 및 체험 인프라 조성 등 ‘지역 단위 식생활교육 시스템 구축’ 시범추진(‘18년, 3개 지역)
- (식습관 개선) 아침밥 먹기 생활화와 쌀 간편식 소비 지원 등으로 균형 잡힌 영양섭취 및 식습관 개선 유도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 확산(‘17: 10개 대학 → ‘18 : 20), 기업 협력을 통한 직장인 대상 쌀 간편식 할인판매 등 추진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 확대]

- (바우처) 저소득층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식생활 교육을 병행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 검토
 - 현금부조가 아닌 식품 구입액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방식, 특정 품목 구매제한 등 올바른 식품 선택환경 조성 방안 검토
 - * 사업 추진체계 설계,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9월, 5억원)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추진(‘18.12)
- (농식품 기부 활성화) 농산물 공급과잉 품목 등을 푸드뱅크와 협력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영양개선 및 수급안정에 기여
 - 농식품 기부 활성화 협의체 소속 단체·협회 대상 기부 의향 사전 조사(3월)를 통해 정기적 기부 유도

4.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조성

1 | 3만불 시대, 살고싶은 농촌으로 재생하겠습니다.

“ 농촌도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갖춰지고 작은 일거리라도 있으면 살만 할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있어요”

➡ 새로운 농촌뉴딜을 통해 일터·삶터·쉼터로서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하고, 농촌과 도시의 포용적 균형성장 도모

* '22년까지 활력거점(신활력) 100개소, 생활거점 1,600개소 조성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지역 역량 | ○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지역역량 미흡 | ○ 대학·연구소·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주체 육성 및 역량배양 |
| 체감도 | ○ H/W 중심, 주민 체감도 저하 | ○ 농촌마을 주민을 고려한 체감형 S/W 프로그램 확대 |
| 농촌 환경 | ○ 도시화·난개발로 농촌경관 훼손 | ○ 자연·생태·문화 등 농촌다움복원 |

[활력 넘치는 일터]

□ 특화산업 육성과 생활·문화 기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신규 추진('18: 10개소)

* ('18) 10개소 → ('19) 20 → ('20) 20 → ('21) 20 → ('22 누계) 100

○ 대학·연구소·주민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직을 구성하고, 자원 발굴, 산업기반 고도화, 생활문화 콘텐츠 개발 등 특화산업 육성

- 정부는 지역순환경제, 생태문화 등 기본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 유도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괄 지원하는 '계획협약' 시범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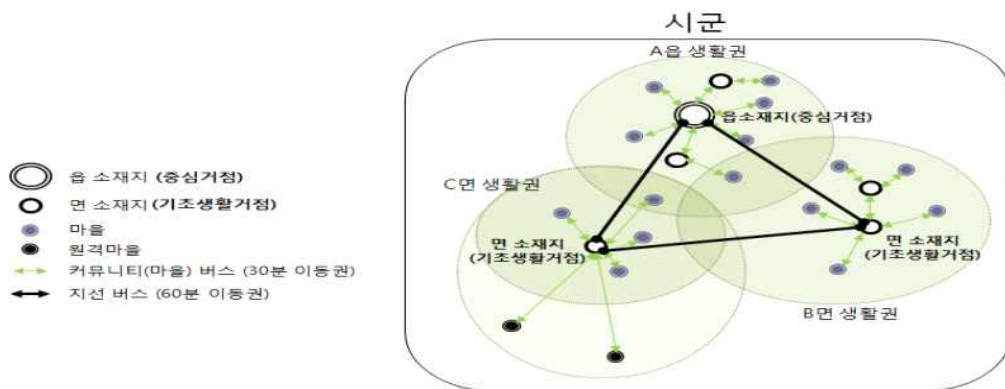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문화·복지 등 동 협약에 포함된 관련 사업은 일괄 지원(개별사업 심사 생략)

[고르게 잘사는 삶터]

□ 농촌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 불편 없도록 중심지~기초생활거점
~마을을 연결하는 '3·6·5 생활권*' 구축('18.하)

* (예시) : (30분) 노인·영유아 보건복지 서비스 / (60분) 창업지원, 평생교육 서비스
/ (5분) 독거노인응급관리, 건강모니터링 등 안전·응급 연락체계

< 3·6·5 생활권 개념도 >



○ (중심거점) 문화·교육 등 서비스 제공과 공동시설이 집중된
최상위 거점으로서 중심지(읍) 100개소*(~'22) 조성('18년 5개소)

* ('15~'17) 67 → ('18) 5 → ('19) 5 → ('20) 5 → ('21) 8 → ('22) 10

- 중심지활성화사업 신규 추진 시, 배후마을 주민을 고려한 체감형
프로그램 도입 의무화(총사업비의 10%)

○ (기초생활거점) 면소재지에 생필품, 돌봄교실, 건강상담·진료
등 기초서비스 공급거점 500개소(~'22) 조성('18년 100개소)

- 접근성이 제한된 원격지, 인구 감소지역 등 취약지역 우선 고려

○ (창의마을) 노후 주거지 정비, 무선방송·안전 가로등 등 생활편의
시설을 도입한 창조적 마을 1,000개소(~'22) 조성('18년 200개소)

[도시민과 함께 하는 쉽터]

- 농업유산, 산림·하천 생태권, 공동체 등 농촌 자원 발굴 및 보전을 위해 '농촌다움복원사업' 신규 추진(개소당 20~30억원 지원)
 -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구현을 위해 사업 콘텐츠 중점 지원
 -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마을, 읍면, 시군 등 다양한 범위 참여 허용

(예시) 역사·문학 탐방을 테마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토지길'(하동군)



- (조성배경) 소설 「토지」의 실제 배경인 하동 지역 곳곳을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 (코스) 평사리 공원~들판~동정호~최참판댁~조씨고택~취간림~악양루~평사리공원(18km)

- 농촌 경관, 농업기술 및 지역공동체 등 농업·농촌 자원에 대한 보전·관리 체계화로 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자원 지역을 대상으로 자원조사, 자원의 발굴·복원 및 환경 개선 지원
 - * 지원내용 : 3년간 15억원 지원(국비 70%), '22년까지 누계 20개 선정 추진(매년 2개소 선정)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확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니터링 등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유산 보전·관리 강화
 - * 국가중요농업유산 '22년까지 총 20개소 지정(세계중요농업유산 4개소) 목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20년)을 위한 전시물을 확보('18.2~) 하고, 설계 및 건축공사 발주('18.10) 추진

2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ی겠습니다.

“ 젊은 사람들도 살만한 곳이 되려면 교육, 보육, 문화서비스가 나아져야 합니다. 소득 없는 농촌어르신 복지도 문제입니다”

➡ 교통·의료·교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령농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농촌주민 정주 만족도(10점 만점): ('16) 5.62 → ('18) 5.66 → ('22) 5.7

* 농촌형 교통모델 시행 지자체 수: ('17) 18개소 → ('18) 82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복지 증진 | ○ 일부 지역 100원택시 도입('17년 18개소) | ○ 농촌형 교통서비스 전 군지역으로 확대 |
| 국민 연금 | ○ 농외소득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저소득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령 개정 추진 |
| 여성 | ○ 공동경영주 등록 시 배우자 확인 필요 | ○ 배우자 확인 없이도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 |

[기초서비스 접근성 제고]

□ 농촌지역에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 (교통)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全 郡지역으로 확대 ('18: 82개소)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의료) 농촌지역 분만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농업인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연구·예방 활동 추진
 - 분만취약지역('17년 34개군) 지정 기준 완화 및 서비스 지원 확대(복지부 협업)
 - 농업안전보건센터(5곳)를 통한 무료 건강검진 추진(5천명)
- (교육) 농촌 유학 활성화를 통해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1읍·면, 1초·중학교' 설치·유지전략 마련(교육부 협업)
 - 농촌유학 시설·인적 역량 제고, 교육프로그램 내실화·다양화, 다규제작 방영 등 홍보 확대('18년 유학센터 25개소, 유학생 수 260명)

- (보육) 소규모 보육시설 확대('18년 52개소), 영유아 혼합반 허용 등 추진 (복지부 협업), 농촌지역 영유아 아동수당 지급(9월)
 - * 월평균소득 90% 이하 가구 72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월 10만원 지급
- (인력) 취약농가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등 인력 지속 지원
 - * 사고·질병·여성농업인 교육 시 영농도우미 지원(15천가구), 고령자·다문화 등에 행복나눔이 지원(14천가구)
- (문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문화 활동 지원 확대
 - * 교육문화복지 27억원('17 : 175개소 → '18 : 200), 농촌축제 5억원(57개소 → 70)

[공적연금 지원확대]

-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 제도개선과 홍보 추진
 - 농지 감정평가율을 상향 조정(현행 80% → 90)하여 월지급액 증액*
 - * 월지급액 약 12.5%: (현행 80%) 100만원 → (90% 적용) 112.5
 - 신규상품* 위주로 가입대상자 및 자녀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가입대상자의 채무부담 및 자녀반대 등 부정적 인식 해소
 - * 일시인출형(종신), 전후후박형(종신), 경영이양형(기간)
 - (가입대상자 대상) 안내서 발송, 전화·상담, 직접 방문 등
 - (자녀층 대상) TV·신문 등 방송매체, 지하철·버스 광고, SNS 등
- (국민연금)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확대
 - 저소득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개정 : (현행)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경우 제외 → (개선) 과세소득·재산기준 적용(예 : 과세소득 27백만원 미만 지원, 재산 6억원 이상 제외)
 - 보험료 지원액 상향*, 보험료 지원 일몰 연장 추진('19 → '24, 복지부 협업)
 - * 기준소득금액(월 최대지원액) 인상 : '17년 91만원(40,950원) → '21년 100만원(45,000)

□ (기초연금)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인상

* '17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부부 190.4만원) → '18년 단독가구 131만원(부부 209.6만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17년 20.6만원(부부 33만원) → '18년 25만원(부부 40만원) → '21년(안) 30만원(부부 48만원)

○ 기초연금 인상으로 농촌지역 65세 이상 노인 약 86만명에게 지급되는 연금액 증가(실제 월 평균지급액 '17: 약 18만원 → '18: 22)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1월), 후계농업인 교육에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및 교육 이수 후 부부공동경영협약 작성 유도

* 공동경영주 등록시 배우자 확인 서명란을 삭제, 여성농업인 스스로 공동경영 여부를 선택하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

○ 조합 업적평가 반영 등 제도개선, 교육·홍보를 통해 농협 조합원 및 임원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17: 조합원 31.5%/임원 6.1% → '18: 35%/10)

□ 도우미 지원 확대, 결혼이민여성 대상 일대일 후견인제 및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제공 추진

○ 도우미 지원범위 확대(출산·사고·질병·취약가구 → 교육도우미 추가), 지원단가 인상(6만원 → 7), 결혼이민여성 멘토·멘티 풀 구축(1천건)

○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검진항목, 검진대상 및 소요재원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18.하)

* 향후일정 : ('18) 연구용역 → ('19~'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21) 시범사업

○ 지자체의 '행복바우처' 지원연령 가이드(20~75세 이하)를 제시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원 확대 유도

3

사회적 경제 등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영세한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들다.”

➔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발전체계 고도화 및 사회적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단위 네트워크/농촌융복합산업지구(누적): ('17) 25개소/16 → ('18) 38/20 → ('22) 92/36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융복합 산업 | ○ 청년 농업인의 참여 저조 | ○ 융복합산업 경영체 성장 단계별로 청년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 |
| 농촌 관광 | ○ 정부 주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차별화된 즐길거리 부족 | ○ 농촌현장 주도로 지역의 특색있는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
| 사회적 농업 | ○ 일부 지역에서 민간 차원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 존재 |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지원하여 (시범사업 9개소) 사회적농업 확산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및 지역단위 확산]

□ (경영체 육성)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경영체의 안정적 성장 유도

○ 성장 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17: 69개소 → '18:74)등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성장 지원

- 사업모델 공모전을 개편하여 귀농·귀촌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 창업 촉진('18.5)

○ 지역 내 농산물 사용, 계약재배 실적 등 지역 내 농업인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인증제 개편 추진*('18.3)

*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확대: ('17) 1,397개소 → ('18) 1,500(목표)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 및 홍보 등을 지속 지원

○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지자체 조례제정 독려

* 특례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상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숙박시설 등 설치 가능

- (지역단위 확산)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사업 추진방식 체계화
 - 지역내 1·2·3차 산업주체 간 연계수준*을 평가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컨설팅 도입 등 사업방식 개편('18.6)
 - *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농업인 간 계약재배(수매), 협력방식 등
 - 청년·고령농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대상 선정

[현장 중심의 농촌관광 활성화]

-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농촌현장 주도로 지역의 음식·숙박·체험을 연계한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 농촌관광 협의체*를 통한 상향식 콘텐츠 개발방식 도입(6개소)
 - * 농촌관광 사업자와 전문가·현장활동가 등으로 구성
 - 동식물·곤충을 활용한 치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10개소)
- (운영주체 육성) 농촌 정착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을 농촌관광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기존 운영주체의 역량 제고
 - 한농대 교과과정을 통해 농촌관광 교육을 실시하고, 도농교류법을 개정하여 농촌관광 해설사 양성·지원방안 마련
 - 농촌관광 등급제와 연계한 멘토링 시스템 신규 도입(200개소)
- (농촌여행 기반구축) 농촌관광 등급제를 개편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초·중학생 대상 농업·농촌 체험 활성화 지원
 - 농촌관광 등급제를 개편*하고(12월), 농어촌민박의 위생기준 강화** (6월)
 - * 도농교류법 하위법령 개정: 불시·사후평가 신설, 우수등급 대상 정책사업 우대 등
 - **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 위생기준 구체화 등 숙박업에 준하는 기준 도입 등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 농촌 활력 증진]

□ 농업·농촌 가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육성

*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교육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돕고, 고용으로 연결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활동

○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18년 9개소, 528백만원)

* 프로그램 예시: 농업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노인 돌봄서비스, 직업 농업교육 프로그램, 취약계층 대상 농산업 일자리 제공 등

- 농진청에서 개발 중인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 사회적농업을 지원할 근거인 사회적농업법 제정 추진(12월)

□ 농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인력) 한농대, 귀농귀촌센터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 귀촌희망자 DB와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매칭 추진

○ (창업) 지역 내 유희시설을 창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농업 조직의 기반 마련 지원

- 사회적농업 조직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역기금 조성,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18)

○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

5. 참여와 협력의 농정 거버넌스 구축

1 | 현장 중심의 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농업인 바람과 농촌 현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서 정책의 문제와 답을 찾고 농업인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하여 현장 눈높이에 맞는 농정 개혁 추진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현장 농정 | ○ 일회적이고, 성과 확인 곤란 | ○ 장관부터 직원까지 현장농정 체화 정책 개선 사례 창출(이력관리) |
| 농특위 | ○ 관 주도의 농업·농촌정책 수립 | ○ 농업인, 정부가 함께 중장기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 |
| 농어업 회소 | ○ 대의기구로서의 위치·역할 불안정 | ○ 농정참여 주체로서 위상 제고 |

[현장농정]

□ (계획수립) 주요 정책 분야별 현장 농정계획 수립*(분기)

* 주요 관심분야 선정 후 현장 방문일정 등 마련(필요성, 관심분야, 일정 등)

- 특히, 담당자가 현장농정의 주요 점검사항(왜/무엇을/언제/누구/어디서 /어떻게, 5W1H)을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

□ (이행점검) 주요 현장 이슈에 대해 현장의견 수용 노력, 정책 개선 이행단계를 평가(매월)하고, 현장 만족도* 재점검(분기)

* 실제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 확인, 요구사항 부합, 합리적 대안 제시 여부 등

- 이행단계 평가에 따라 우수사례 후보군을 발굴하고, 현장 만족도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확산) 현장농정 개혁 우수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공감하는 현장농정의 가치 창출
 - 장관 포상, 통합성과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온라인 네트워크(예시, 온-나라 포털 등)를 활용하여 자발적 확산 유도
 - 현장 공감도 제고를 위해 '농정개혁 시·도 보고대회'(1~2월중) 및 '농업인의 날(11월)' 등 대규모 행사를 활용하여 우수사례 확산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 (운영기반 조성) 농특위 설립 ·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운영예산 확보 등 운영기반 조성('18.상)
 - 농특위설치법 제정을 위한 국회·법정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제정 등 추진
 - * 농특위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되어, 국회 농해수위 계류
- (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및 발족, 위원회 분기별 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 본격 운영 추진('18.하)
 -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위한 균형잡힌 위원회 구성 · 발족('18.9)
 - * 농어업계 · 소비자 · 관련 전문가 등 각계 대표 위원 구성, 분야별 분과 위원회 구성 등
 - 본회의 분기별 1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등 연 최소 4회 이상 위원회 개최 추진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활성화 지원]

□ 농업인의 대의기구로서 한국형 농어업회의소 역할 명확화

- 지역 농정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농업 정책 자문·건의 및 위탁사업 수행, 농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실시 등
 - * 거창농업회의소 :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사업,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주민교육,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등 추진
- 기존 농업단체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고유 역할과 안정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연구('18)

□ 농어업회의소 컨설팅 지속 지원('18.상, 2억원)으로 공감대 확산

- '17년 종료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을 '18년 이후에도 확대 추진하여 농어업회의소 설립 활성화 및 공감대 형성 노력 지속 추진
- 기초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역 선정, 설립준비 및 향후 운영방향 등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약 5~10개소)

□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적 근거 마련('18.하)

- 현재 발의되어 있는 농업회의소법안(2건) 국회 논의 대응,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 등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지원

2

지방과의 협력 농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농사가 다른데, 특색에 맞는 농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의 농정역량 제고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명확화 등 자율적·혁신적인 지방분권 농정 구현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지방 농발 | ○ 형식적인 계획 수립, 환류 미흡 | ○ 주기적 이행 점검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 |
| 농정 소통 | ○ 중앙정부 주도 농정 | ○ 농정현안 협의회 정례화를 통한 소통 강화 |
| 역량 강화 | ○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농정 지도 | ○ 지역과의 스킨십 강화를 통한 자발적 역량 강화 유도 |

[지방의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지원]

□ 자체 농정 여건과 농정 방향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별 5년 단위 (‘19~’23)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유도

- 지방 계획수립지침 마련(‘18.3),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중앙은 지방 계획 수립을 지원
 - 농식품부 소관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지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농업 관련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여 지원
 - * ‘19년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자 선정과 연계하고, ‘20년 이후 농업 생산·유통·가공·소비 관련 타 사업으로 연계 추진
 - 지방 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군에 대해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지원체계 개편 추진
- 지방 농발계획에 대한 주기적 이행 점검과 우수 지자체 시상 등 환류체계 구축으로 실행력 제고

[중앙-지방 간 농정소통 강화]

□ 중앙-지방 간 농정 현안 협의회 정례화 등 상호 소통 강화

- 행정부지사·농정국장 회의 및 시·군 농정협의회 개최 등으로 지역 현장 의견 수렴 및 농정 홍보 추진
- 주요 농정대책 마련 시에는 지자체·현장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등으로 공감대 형성

□ 농정개혁위원회* 시·도 보고대회 개최('18.2~3월) 추진

- * 현장 농업인, 생산자·소비자단체, 지자체 등 범 농업계가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방향을 모색하는 농식품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
- '17.8월 위원회 발족 이후 중앙 단위에서 추진한 농정개혁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농정개혁 본격화
 - 지자체 제안 과제 등에 대해 농정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농정 개혁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추진방안 마련('18.상)

[지방 농정추진역량 강화]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하고, 지방이양이 가능한 사무를 조사·발굴하는 등 지방분권 농정 추진을 준비

□ 업무 분야별 중앙·지자체 농정 담당자 워크숍 개최

- 농정방향에 대한 현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정 우수 사례 발굴·공유·홍보 등으로 성과 확산
 - 새정부 국정과제·비전 공유를 위한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 개최('18.2)

□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지자체 농정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3**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FIRST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Field)**

- 정책 담당자가 팀단위로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 방문의 날’ 운영
- 성과 공유 토론회와 우수사례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혁신(Innovation)

- 매주 수요일 퇴근전 60분간 ‘FIRST 60토크’를 통해 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 도출
- 월 1회 전직원 ‘역량 FIRST 강좌’를 실시해서 사회·문화 트렌드 등 직원들의 인문 교양 역량 강화

 책임(Responsibility)

- 의견 수용 노력 정도, 만족도 등 매월 현장농정 성과 평가
- 우수사례와 추가과제 발굴을 위한 지역 순회 농정성과 설명회 개최

 공감(Sympathy)

- 농정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농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 확대
- 국민 생각함, 국민 정책디자인단 운영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를 통해 부내외 소통 강화.

 신뢰(Trust)

- 주요 격무 직위 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1. 농업인은 소득·재해 걱정을 덜게 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17) 30.1%

('18) 33%

채소가격안정제 참여비율



('17) 생산량의 8%

('18) 생산량의 10%

통합마케팅 출하비중



('17) 40%

('18) 42%

2. 농식품 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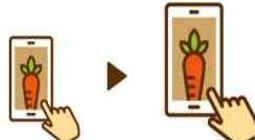
2030세대 비축농지 임대지원



('17) 3,000ha

('18) 3,670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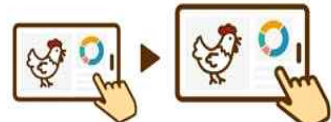
스마트팜 보급 확대(누계)



('17) 4,000ha

('18) 4,510ha

스마트축사 보급(누계)



('17) 750호

('18) 1,350호

3. 소비자의 농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17) 80천ha

('18) 84천ha

깨끗한 축산농장(누계)



('17) 1,029개소

('18) 1,750개소

GAP 인증농가 비율



('17) 8.1%

('18) 9%

4. 농촌은 누구나 살고싶은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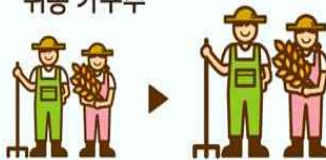
100원 택시 개소수



('17) 18개소

('18) 82개소

귀농 가구수



('17) 13천가구

('18) 14천가구

농지연금 월지급액(평균)



('17) 100만원

('18) 113만원